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문화향기

이미경

(사)책지정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2024년 12월 29일! 제주도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바로 받지 못하고 한참 만에 전화 온 사실을 알고 무안공항 사고소식을 듣고 안부전화를 했나보다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통곡을 하는 친구의 소리에 너무 놀랐다. “어떡해, 어떡해, 동생부부가 그 비행기에 탔대”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사고 소식을 처음 듣고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알아볼 수 없는지 연락을 한 것이었다. 대학교 1학년인 조카로 부터 엄마, 아빠가 여행가면서 보내준 여행사로 연락을 해보니 그 비행기를 탄 것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접하고 기가 막혔다. 여기 저기 안부전화가 오고 단체 카카오톡에서는 명단이 올라오면서 광주가 아닌 대한민국이 발각 뒤집혔다. 각 기관장들에게 흑역사도 우리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의 피해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면서 가슴이 너무 떨렸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알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기 저기 상황이 들려왔다. 전화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누구네가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오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일을 정리하고 무안공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유난히도 동생과 좋은 관계였던 친구는 낮이 나가 있었다.

공항은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에 가족, 친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신원 확인만이라도 되기를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이름이 불러지면 순간 다행이라고 여기게 되었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 엄마, 아빠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혼자 남은 조카 녀석이 안쓰러웠다. 외동딸로 남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믿기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그나마 다행이도 저녁 8시경 남동생을, 10시경 올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보이면 서로 걱정 어린 눈으로 위로했다. 후배 부부가 사고를 당해 중학생 아들만 남겨져서 공항에 함께 왔다는 지인. 함께 일하던 직원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지인. 트라우마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은 도움이 될까 해서 급히 왔다고 했다. 봉사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구호물품들도 도착하면서 유가족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무안읍내를 다 돌아서 떡국거리리를 사갔고 왔다는 무안자원봉사단체에서 저녁을 해결해주었다. 어떻게든 먹고 힘내서 버텨야한다고 친구네 가족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면서 참 고마웠다. 장기전으로 갈 거 같다고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루하루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내고 그 래도 생각보다 빨리 장례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거 없냐는 질문에 친구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 구호물품도 많고 식기도 잘 제공해주고 많이 도움 받고 있다고 감사해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해” 라면서 한없는 감사를 표현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봉사단이 몰려오고 구호물품들이 답지하면서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였다.

법인의 기관장들과 합동 참배를 하고 1월 4일에는 시민 상주가 되어 분향객들을 맞이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 무안공항분향소에서 봤던 낯익은 여학생의 친구인지 어떤 여학생은 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문록에 “○○야 잘지내, 그 곳에서는 행복해”라고 쓰고 부모님과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였다. 친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어 좋은곳에서 평안 할 것이라고 얘기 해주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제대로 밝혀져서 억울한 죽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SNS상에 유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악플러들이 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먼길마다 앓고 달려와 봉사하고 헌신해주는 수많은 훌륭한 국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보내고 싶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社說

정치적 이념 떠나 내수 살리기 전념해야

지역 기업 파산신청 5년 새 최대

지난해 광주·전남기업이 법원에 낸 파산 신청이 5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개인회생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 침체와 탄핵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지역 기업의 법인 파산은 66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5년 새 최대치다. 3년 전인 2022년 법인파산 접수 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의 도산 위기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개인이 접수한 파산 사건은 1732건, 개인 회생 사건 6230건으로 잠정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안팎 수준인 개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감소했지만 개인 회생은 2020년 4714건에서 2023년 6043건을 거쳐 꾸준히 늘고 있다.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 도산이 이어지며 광주·전남지역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는 징후는 확연하다. ‘돈줄이 말랐다’, ‘경영이 버겁다’는 얘기도 여기저기 들려온다. 여기에 탄핵의 불확실성마저 더해지며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불황은 파장이 크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안팎의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 남양건설 등은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가 시작됐지만, 협력하청업체 대금 지불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산 수순을 밟는 건설사도 나왔다.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는 경기부양과 함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를 부양하는 조치들을 서두르는 게 그 첫걸음이다. 경제 악화의 근본 원인인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 필요한 체불임금 청산

강제수사 엄정 대응도 필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시름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우위니아 노동자 2000여명은 1000억원대 임금 체불에 이어 지난해 117억원의 임금도 밀린 상황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불 피해를 신고한 광주·전남 노동자 수는 누적 9160명으로, 2023년 8742명에서 418명이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2024년 한 해 동안 878억818만4878원이 집계돼 2023년보다 약 39.2%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급증했지만 청산 규모가 따라잡는 속도는 더뎠다. 지난해 누적 청산 규모는 373억8624만 8629원으로 2023년 334억6665만 6648보다 불과 11% 늘었다. 체불임금이 늘어난 데는 대우위니아 때문이다. 법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해 하반기에 임금 11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전체 체불 규모가 늘었다. 대우위니아는 지난 2023년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자

사 소유 골프장과 빌딩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내 건설업·제조업 불황 여파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업 비수기인 동절기에 하청사가 줄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에게 임금은 가정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대금을 못 받아 임금을 제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업주를 구제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변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우위니아 같은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연말 탄핵정국 속에 제주항공 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새해를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생경제마저 외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겪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보나 칼리나' 여단 소속 군인들이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D-20 포를 발사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바나나 공화국(Banna Republic).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의 성질을 빗댄 말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바나나 따위의 한정된 농산물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부패한 독재자와 그 수하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마지막 잎새’로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오 헨리(O Henry)가 은행에 근무하다가 공금을 횡령하고 남미로 도망쳤을 때의 경험을 쓴 단편집 ‘양배추와 임금님(Cabbage and King)’에서 처음 쓴 용어다.

‘바나나 공화국’의 대표 사례로는 중미의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이다. 오 헨리가 도피했던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였다. 1838년 독립하고 반세기 뒤 오 헨리가 방문할 때까지 수백 건의 쿠데타와 정권 교체를 겪었다.

부패나 소요사태로 인해 정국이 불안한 국가인 ‘바나나 공화국’은 비민주적 후진국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독립 선언 이후 245년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의사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전 세계 TV가 생중계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자의 차기 대통령 당선 확정을 위한 상하원 회의가 열리는 의회에 난입해 유혈 사태를 빚어졌다. 이 사태로 경찰관 140여 명이 다쳤

고 5명은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1600여 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 127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700여 명은 경찰 폭행이나 무기 사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엄중 처벌을 받았다. 비민주적 후진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였고, 오랜 삼권분립의 전통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문화의 상징인 미국식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여기가 바나나 공화국이나”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시위대원을 사면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직 대통령 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발생했다. 일명 ‘바나나 공화국’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이번이던가. 지난 19일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로 중상 7명을 포함해 경찰관 42명이 다쳤다.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바다에 쓰러진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공권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난란을 꾀하고 가짜 뉴스와 폭동을 선동하는 세력과 결탁해 헌법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후진정치가 국력이 하루아침에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